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1
----------	------

발의연월일 : 2024. 7. 31.

발 의 자 : 한병도 · 신영대 · 윤준병  
안호영 · 이춘석 · 이성운  
박희승 · 이원택 · 정동영  
황정아 · 신정훈 · 김윤덕  
윤건영 · 박정현 · 양부남  
김성희 · 위성곤 의원  
(17인)

##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앞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인 재정에 대한 특례가 제외되었고, 지방소멸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의료복지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특례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전부개정법률에서 빠지게 됨.

따라서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위한 핵심 요소의 자치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인구 제도와 전북형 귀농 정책의 추진,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촌 지역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안 제24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농생명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안 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매각·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 추가(안 제63조)

법무부장관이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함.

라. 지방소멸 대응 인구유입 제도(안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신설)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생활인구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에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안 제83조의2 및 제116조의4 신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안 제116조의2 신설)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건비성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안정적인 재정 확보(안 제11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의 100분의 25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지원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으로,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공유재산”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를 “종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술평균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완충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11조제1항제1호”를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3호 및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시설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새만금 고용특구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

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지방교부세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4(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수의료 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범위 및 절차,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5(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4의 특례는 이 법 시행  
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4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  
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u>&lt;신    설&gt;</u>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지원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u>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u> 을 입주기업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u>종사</u>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 ----- ----- <u>공유재산</u> ----- ----- ----- <u>종사</u> -----

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하는 자-----  
-----  
-----.

② -----  
-----  
-----  
-----  
----- 산술평  
균한 금액 이상----.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  
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  
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  
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



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⑥ (생략)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 보호지역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3호 및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신설>

<신설>

제11조제1항-----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케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케도시설

<삭제>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

	<p><u>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매각·교환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u></p>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생략) 1. ~ 4. (생략) <u>&lt;신 설&gt;</u> <u>&lt;신 설&gt;</u>	<p>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새만금 고용특구</p> <p><u>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u></p> <p><u>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p> <p><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u></p>

<신 설>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

<신 설>

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신 설>

<신 설>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6조의3(지방교부세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신 설>

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6조의4(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

<신 설>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  
부금품의 모집 범위 및 절차,  
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은 「기  
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  
한다.

제116조의5(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4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4의 특  
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  
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p><u>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